

■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Q & A

Q: 차별시정 절차와 차별행위 처벌은  
A: 발생 3개월내...최고 1억원 과태료

노동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시정제도를 소개한 안내서를 3일 발간했다.

차별시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차별시정의 대상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규직은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차별시정에 대한 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전일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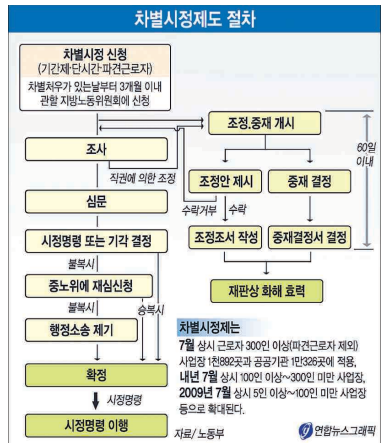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은 어떤 것이 해당되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임금과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산전·산후휴가 등 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이 해당된다.

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이 근로 조건으로 규정돼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둘 수 없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누진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차별행위로 판정을 받게 된다.



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똑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차별을 받았더라도 노조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도 차별시정을 제기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파견사업주는 해고와 퇴직급여제도, 임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 차별시정 책임이 있고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모든 사업장이 차별시정 대상이 되나.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7월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천892곳과 공공기관 1만 326곳에 우선 적용된다. 내년 7월에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Q: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업주 책임 범위

A: 파견-임금, 사용-근로시간에 책임

-차별시정 절차와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지방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되고 중노위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조 등 집단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나.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을 받았다

해외 여행객 평평 쓴다

1분기 4조6,308억...작년 동기비 16% 증가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해외에서 쓰는 돈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해 국내 체감경기의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계의 해외소비 지출액은 4조6천30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소비 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편이다.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0.4%에서 2005년 3.6%의 증가로 돌아섰고 지난해 증가율은 4.2%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해외 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

년 19.9%, 2005년 22.5%, 2006년 17.5%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의 해외 소비지출은 주로 해외 여행경비와 유학 연수비, 의료비 등으로 빠져나간다. 올해 1~4월 해외여행과 유학·연수경비로 해외로 빠져나간 외화는 65억7천52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5% 증가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6조2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해외 여행객들의 현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1분기 14억1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4.3%나 급증했으며 사용자도 198만 명으로 23.8% 증가했다. 이밖에

증여성 해외 송금액은 올 들어 4월 말까지 26억4천만 달러를 나타내 12.6%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의 해외소비 지출이 모두 국내 소비로 전환됐을 경우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3%포인트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소득 통계에서 민간소비 지출이 4%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수치에는 해외소비 지출이 포함돼 있어 실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지적이다.

7월부터 경유관련 세금 인상  
고유가에 '설상가상'

정부가 7월부터 경유에 붙이는 세금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1일 확정, 발표함으로써 2005년부터 단행해온 2차 에너지 세제개편(경유 관련 세금)을 마무리했다.

2005년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전 휘발유의 경우·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은 100대 70대 53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에 붙이는 교통세와 주정세·교육세 등 세금을 올려 가격 비를 대폭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유 승용차를 허용한 이상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세금인상을 통한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는 게 주된 명분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유류세 인상이

단행되면서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75로 올랐고 2006년에는 80으로 조정됐다. 이 비율이 오는 7월부터는 다시 85로 뛰어 오른다.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이 2년 새 15%포인트나 뛰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주유소들의 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경유가 1차 인상 직전인 2005년 6월 1당 1천359원이었지만 올해 4월 1천215.32원으로 17.4% 상승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값은 7.3% 올랐다.

경유가격은 오는 7월 2차 조정이 단행되면 다시 1당 35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까지 시장에서 더 오르는 원유나 경유 품 가격의 반영분은 제외할 게 그렇다.

세금과 무관하게 기름값이 올라 원래 목표했던 상대가격을 넘어서는 문제는 정부도 어느 정도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6개월 단위로 소비자 가격을 조사해 100대 85인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비율이 상하 5% 범위를 벗어나 움직이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세금비율이 100대 71인데 가격변동과 무관하게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21 22 26 27 31 37	08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433,330,100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195,347	29
3 5개 숫자 일치	1,457,271	1,178
4 4개 숫자 일치	57,657	59,548
5 3개 숫자 일치	5,000	901,409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1조 443975
2	5억	1조 443976 1조 443974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58102
5	1만	각조 527
6	2천	각조 46
7	1천	각조 38 각조 8

국민은행 고객 차별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20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우수한 사람에 비해 금리가 2배 가까이 더 높게 적용된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에서 1억원까지 차별화하고 있다.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신용평가(CSS) 1등급이면서 소득등급도 A등급인 고객이다. CSS는 대출 상환과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정보가 축적된 신용등급으로 1등급에서 13등급까지 있다. 소득등급은 A등급, 1~5등급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20배 차

등 6개 등급으로 A등급은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 한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이 주종을 이룬다.

결국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직 고소득자 또는 고위 공무원이면서 꾸준히 신용관리를 해온 사람들로 한정된다.

국민은행은 13등급 중 9등급 이하의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많더라도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고객등급에 따라 2배 가까이 차이나나, 3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CSS 1등급 고객은 연 6.86~7.56%이지만 8등급 고객은 11.76~12.46%의 금리가 적용된다.



“에디슨 축음기로 녹음해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전시장을 찾은 학생들이 에디슨 축음기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비 늘고 담배규제 완화”

국내외 전문가들 한미 FTA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약값 등의 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담배규제 등 보건의료 분야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경고가 해외 FTA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회는 3일 서울 서울의대 합춘회관에서 ‘한미FTA 협상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FTA 국제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미FTA는 미국이 검토중인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나 미-호주 FTA보다 더 강력하게 의료분야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담배규제가 완화되고 민간보험이 확대되는 등 공공보건의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미국 ‘무역과 건강’에 관한 정책

분석센터’ 공동대표 엘렌 샤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 임상교수는 이번 협정은 약값에 시장논리를 강력하게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약값 부담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샤퍼 교수는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에 약값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약값결정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 아울러 이번 협정이 담배규제를 역행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샤퍼 교수는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데 더해, 광고제한과 경고문부착 등에 관한 규제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흡연율과 그로 인한 사망률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로 기업생산성 0.9~1.4% 향상

KDI 연구위원 전망

수입 관세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국내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0.6~0.9%포인트 내려가면 기업의 생산성은 최소 0.9~1.4%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장 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수

입 관세율의 변화가 1992~2003년 중 고용인원 50인 이상 제조업체 15만여개의 생산성 증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3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 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약 1.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별로 보면 50~100인 사업체의 생산성이 2.2% 정도 증가해 생산성 제고 효과가 가장 높았고, 100~300인 1.6%, 10~50인 1.5%, 300인 이상 1.1% 등의 순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4개월여만에 첫 하락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4개월여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지만 금리 하락세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77~7.37%는 지난 주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주간 단위로 고시되는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2월19일 이후 처음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이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주 초보다 모두 0.03%포인트 하락한 6.14~6.84%와 6.15~7.00%로 고시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5.96~7.46%와 6.06~7.16%로 0.01%포인트씩 하락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개월여만에 하락한 것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대출 금리 하락세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